

# 靑, 인국공 사태 “청년 절박함 마주...공정·혁신 전력”

### “다른 공공부문과 불공정? 현재까지 공공부문 19만여명 정규직 전환” “모든 세대 아픔 공감 위해 전력...혁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청와대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라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

한다”라며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라며 “최초 SNS에 떠돌던 글에서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칭한 분이 마치 아무런 공지조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5000만원대의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일부 언론이 ‘로또채용’이라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국공 논란은 다른 공공부문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라며 “그런데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만 약 19만여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일부 민간부문으로도 과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휴플러스가 비정규직 제도를 내걸고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제의 또다른 본질이 ‘인국공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라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 (연봉도) 5000만원이 아니라 (최대) 3800만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장기적으로 ‘공정’과 ‘혁신’과 연결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늘 강조했다”라며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정책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가치와 전체적으로 채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상은 높고 현실은 낮은 데서 비롯된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질문에 “혁신을 통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 1



코로나19 대응 위해 머리 맞댄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중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세 멈춘 北...국면전환 나설 새 통일장관 인선 주목

### 文대통령 ‘고심’...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 가능성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일방적 파괴까지 단행한 북한이 ‘숨 고르기’에 나선 듯 공세를 멈추면서, 이를 계기로 공석이 된 새 통일장관 인선이 금방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영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답화 이후 쏟아지던 북한의 비난 공세는 20여일만에 멈췄다.

북한이 이같은 공세를 멈춘데에는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에 효과를 거둔데다 정부가 대북전단(빠더) 살포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성인

사를 단행하는 등도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위원장이 전면전에 등장해 남측을 향한 군사행동에 ‘보류’ 결정의 내린 것은 공을 우리 정부로 넘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석이 된 통일장관에 새 사람을 앉히고, 더 나아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공석을 메꿀 통일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임기초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아 새로운 인선으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신임 장관으로는 정무적 감각을 가진 중량급 정치인이 적격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일부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는 이유로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장관 직 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호 차관의 승진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통일부 수장 자리를 맡아 지휘하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청와대, ‘공수처 강행 수순’ 지적에 “법이 정한 절차 지켜달라는 것”

### “공수처장, 국회 추천 없인 대통령 임명권 행사 불가”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을 두고 ‘공수처 강행 수순’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문 대통령의 공문 발송 사실이 알려진 것을 상기시킨 뒤 “이와 관련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명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 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 “공수처도 강행 수순”이라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보면, 7

월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법 부칙의 내용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14일이다. 그래서 (시행일이) 7월15일”이라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강행을 하느냐.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법률 공포 후 다섯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장악의도라고 공식 주장하는데,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것도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안정적인 검증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